'1인3역' 행세하며 15세 성폭행 시도한 군인

복수 페이스북 계정으로 미성년자에 접근

신체 사진 요구하고 "유출하겠다" 협박해

원심서 대부분 무죄…대법 "혐의 인정돼"

여러 개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1인 다역'을 하며 미성년자 피해자를 속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군인이었던 A씨는 지난 2017년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받은 뒤 유출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페이스북에 3개의 계정을 만들어 1인 다역을 하며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즉 다른 남성인 척 연기하며 피해자에게 사진을 받고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갑자기 본인이 나타나 경계심을 풀면서 접근하는 일종의 연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진을 받은 뒤 개인정보와 함께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으며, 성관계를 하면 사진을 삭제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A씨는 지난 2018년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간음 행위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며 "위 협박을 간음 행위에 사용하려는 고의를 갖고 있었다거나 협박이 간음 행위의 수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에 대해서는 "만 15세인 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협박에 못이겨 성관계를 결심하기만 하면 A씨가 간음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협박을 간음 행위에 사용하려는 고의 및 협박이 간음 행위의 수단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가려봐야 한다"면서 "외관상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봉우 기자

행진하는 1.5도를 지키는 동네방네 기후행동 in 서울 1.5도를 지키는 동네방네 기후행동 in 서울 회원 및 참석자들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줄여라 온실가스, 부끄럽다 정부계획!" 등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이날 1.5도를 지키는 동네방네 기후행동은 과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과 2050년 배출제로를 촉구하는 행돈을 전국 20여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광주서 두 달만에 또 '이물질 수돗물' 나와

정확한 원인·이물질 성분 등 분석중

광주에서 두 달만에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0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0~30분께 동구 산수동과 북구 두암동 인근 아파트 단지 2곳에서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섞인 흐린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두 단지를 합쳐 1600여 가구에 이른다.

상수도본부는 저수조 청소와 물갈이 등 긴급조치를 취하는 한편 정확한 원인과 이물질 성분 등을 분석중이다.

인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파악중이다.

앞서 지난 9월에는 광주 동구 산수동과 지산동 일대 주택가에서 '수돗물 색상이 흐리다', '녹물이 나오는 것 같다'는 신고가 100여 건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상수도본부는 주택가 100여 가구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일시적으로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사고는 주변 아파트 단지에 공급할 수돗물이 대거 상수도관으로 유입되면서 유속이 빨라지는 바람에 이물질이 섞인 물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이슬 기자

광양경찰 야간 보행 불안하지 않아요

광양경찰서(서장 김중호)는 광양읍 주민제안공모사업에 '주민안심 걷고 싶은 골목길 조성'사업으로 참여, 최근 광양읍 골목길(남문길 400m 구간)에 LED보안등을 설치,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2차 사업으로 지난 6월, 읍성길(250m)에 LED보안등을 설치한 1차 사업이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어 이번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주된 골목길과 연결된 막다른 골목길까지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김중호 서장은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가로등만으로는 균일하게 밝힐 수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일정한 간격으로 LED보안등을 설치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든든한 이웃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거짓말한 딸에게 가위 던진 40대 엄마…2심도 집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방용 가위를 던져 딸을 다치게 한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8일 오후 6시 40분께 광주 지역 자신의 아파트 주방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주방용 가위를 던져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자신이 없는 사이 컴퓨터로 드라마를 봤는데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훈육 과정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체적 학대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동취재본부

집합금지 무시 PC방 영업·격리 중 은행行…2명 벌금형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영업한 PC방 업주와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와 B(62)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와 접촉해 지난 9월 8일부터 18일까지 광주 지역 주거지에 격리 조치됐다.

A씨는 격리 기간 중인 지난 9월 10일 오후 12시1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은행을 찾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6시3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이 게임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봉우 기자

아들 놀린 친구들 차에 가둬 '밟아 죽인다'며 협박

자신의 중학생 아들을 놀린 동급생들을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한 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신체수색·감금·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5시 38분께 광주 한 네거리에서 중학생 3명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6분간 가두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에게 '친구들이 어머니의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을 만들었다. 장난전화를 걸어 해당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는 말을 듣고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정 기자